



보도 일시	2022. 11. 3.(목) 11:00 < 11.4.(금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1. 3.(목)
담당 부서 <총괄>	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과	책임자	과 장 이재식 (044-203-5360)
		담당자	사무관 노진만 (044-203-5362)

국내산업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

- 산업부,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제시 -
- 정부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업체계 전면 개편 -

- 산업통상자원부(이창양 장관)는 '22.11.3.(목) 「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」 1차 회의를 개최하여, 「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」을 발표하였다.

< 제1차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2.11.3.(목) 16:00~17:30 /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
- 참석자 :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(주재), 산업·기재·과기정통·농식품·환경·국토·해수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, 민간위원 등
- 안건 :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

- 그간 재생에너지 정책은 급속한 보급에 치중하여,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 체계, 계통부담의 가중, 주민수용성 악화, 국내 관련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.

- 특히, 지난 9월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, 재생에너지 예산 및 사업 집행 과정에서 위법·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집행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.

*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“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첫 운영실태 점검” 관련 보도자료(9.13) 참고

- 이에, 산업부는 국내 산업에 기여하고,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추진을 위해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, 16개 과제를 도출하였다.
- 「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정책현황 및 평가

- 정부는 지난 '17년 12월 「재생에너지 3020」 수립 이후 입지규제 개선, 지원 예산 확대, RPS의무비율 상향 등 정책역량을 총 동원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해 왔다.
- 그 결과, '17~'21년도 재생에너지 설비는 18.3GW로 '12~'16년 (5.9GW) 대비 3배 이상 보급이 확대되었고, '21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6.3%로 '17년(3.2%) 대비 2배 가량 상승하였다.
- 다만, 급격한 보급확대 위주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, 비용 효율성이 낮고, 계통부담의 가중, 주민수용성 악화, 국내 산업 생태계 약화 등의 문제들도 발생되었다.
- ① 소규모에 유리한 REC가중치, 한국형 FIT, 1MW 이하 계통 무한접속 등 소규모 태양광 위주로, 전력수급 안정성과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보급이 이루어졌다.
 - 특히 보급지원 예산 사업은 급격히 확대되어왔으나, 미흡한 사업관리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다.
- ② 수월한 허가 기준으로 인해 풍황계측기 선점 등으로 계측기가 난립하고, 과도한 계측기 프리미엄 발생과 급격한 발전사업 허가 확대 과정에서 사업자간 분쟁, 어민 반발 및 시위가 확대되었다.

참고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개요

□ 정책심의회 개최 개요

- 일시/장소 : '22.11.3(목) 16:00~17:30,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
- 개최근거 :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 제8조
- 위원회 구성
 - 위원장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
 - 당연직 : 산업·기재·과기정통·농식품·환경·국토·해수부 국장
 - 위촉직 : 유관기관(에공단, 한전, 거래소, 에경연, 에기평, 에기연), 민간위원(학계, 법조계, 시민단체, 협회 등)

□ 심의 안건 : 보고 1건

- 2022년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 실행계획
 -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추진 전략

□ 세부일정

시 간		내 용	비 고
16:00 ~ 16:05	5분	인사말씀	에너지산업실장
16:05 ~ 16:20	15분	안건발표	재생에너지 정책과장
16:20 ~ 17:25	65분	질의응답	참석자
17:25 ~ 17:30	5분	마무리말씀	에너지산업실장

- ③ 전력계통을 고려하지 않은 보급으로 송변전 설비 증설 등 계통 부담이 확대되었으며, 간헐성이 큰 태양광 위주의 보급으로 전력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되고, 계통보강 및 유연성자원 설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초래되었다.
- ④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농지잠식에 따른 농어민 반발, 주민갈등 확대 등 주민수용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며, 산지태양광이 대폭 확대되면서 풍수해 관련 안전사고 우려도 확대되었다.
- ⑤ 보급우선 정책으로 국산 제품보다는 외산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확대 되고, 오히려 관련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, 국내 일부기업은 태양광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국내산업의 공급망과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었다.

정책방향

- 이에, 산업부는 ①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, ②비용효율적이고, ③계통 및 ④주민수용성에 기반한, ⑤국내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라는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, 16개 과제를 도출하였다.
- ①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인 21.6%로 재설정(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)하고, 이에 맞춰 `23년부터의 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며, 태양광, 풍력 발전량 비율을 현재(`21년) 약 87:13에서 `30년 60:40로, 태양광·풍력간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 - 특히, 해상풍력발전은 풍황계측기 허가요건 및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, 계획입지 개발방식 도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.
 - 아울러, RE100에 가입(현재 25개)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「RE100 기업 얼라이언스(Alliance)」를 구성하여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

강화하고 RE100 가입기업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RE100 이행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② **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**을 위해 REC 가중치 제도, 입찰 제도 등을 개선하여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·보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고, **한국형 FIT**에 대해서도 **전면 재검토**하여 **일몰 또는 전면개편**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풍력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**풍력입찰시장 도입 확대**할 것이며, **중장기적으로 현 RPS제도를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**을 검토할 계획이다.

○ 아울러, 정부 지원의 부정·불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**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**를 실시하고, 설치 보조금, 용자 지원 등 정부 예산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**사업 집행과정의 관리·감독 강화, 보조금 입찰제도 도입 등 사업체계를 전면 개편**할 계획이다.

③ **계통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생에너지 보급**을 위해, 계통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**계획입지 시범사업**을 실시하고,

○ 발전사업 허가시 계통상황에 대한 **심사요건을 강화**하며, **1MW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**하여 **계통수용성**을 고려하여 **재생에너지 보급**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④ **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**을 위해, 발전소 인접주민 지원 강화 등을 담아 **주민참여사업제도를 개편**하고, **주민수용성 제고**를 위한 **가이드라인도 제정**하여 발전사업자가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산지나 농지 개발보다는 주민반발이 적은 산업단지 공장·주차장, 용배수로 등 **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**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, 지자체별 상이한 규정으로 보급에 애로가 큰 **이격거리 규제**는 **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**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.

⑤ **국내산업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**을 위해, **탠덤 셀 등 차세대 기술의 세계최초 상용화**를 추진하고, **탄소검증제 강화** 등을 통해 **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**할 계획이다.

○ 풍력은 대형터빈, 핵심부품, 설치선 분야의 **핵심기술개발**을 가속화하고, 국산부품 사용 유도를 통해 **국내 풍력산업 밸류체인을 고도화**하는 등 **관련산업 육성과 연계**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**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**은 **금번 「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」** 발표를 통해 **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의 주요 에너지원인 만큼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**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,

○ **기존의 보급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 벗어나,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**하고, **국내산업을 활성화**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여 **재생에너지 정책과 사업을 추진**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.

□ **금번 발표는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**한 것으로, 이에 따라 개별 정책을 추진하고, **‘23년 개정 예정인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반영**할 예정이다.

【별 첨】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

담당 부서 <총괄>	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과	책임자	과 장 이재식 (044-203-5360)
		담당자	사무관 노진만 (044-203-5362)
	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보급과	책임자	과 장 이경수 (044-203-5380)
		담당자	사무관 이윤섭 (044-203-5382)
	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산업과	책임자	과 장 김용태 (044-203-5370)
		담당자	서기관 김철영 (044-203-5372)